

의안번호	제 89 호
의 결 년 월 일	2023. 9. . (제 307 회)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제 출 자	금 산 군 수
제출년월일	2023. 9. 4.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의안번호	제 89 호
------	--------

제출년월일 : 2023. 9. 4.

제 출 자 : 금 산 군 수

1. 제안이유

- 특별재난지역 선포(2023.7.19.)와 관련된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전 지자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하여 지원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금산군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면대상자

- 1)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 2)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

나. 세목별 감면내역

1) 주민세

- 사망자 및 유가족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을 면제

2)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사망자 및 유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에 부과되는 2023년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3)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

- 사망자 및 유가족이 소유한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 면제

다. 기타

- 1).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
- 2).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등 【붙임】

-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지방의회 의결에 의한 지방세 감면)
-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지방세 감면규모 등)
- 3) 행정안전부 관련 공문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금산군수가 제출한 특별재난지역 선포(2023.7.19.)와 관련된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금산군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1. 감면대상자

- 1)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자”라 함)
- 2)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하고, 이하 “유가족”이라 함)

2. 세목별 감면내역

가. 주민세

- 사망자 및 유가족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를 면제한다.

나.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사망자 및 유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에 부과되는 2023년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

- 사망자 및 유가족이 소유한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를 면제한다.

3. 기타

가.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나.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1.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율·감면액을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 대상·적용 대상자·세목·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3.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5.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정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⑤ 법 제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戰禍), 도괴(倒壊)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⑥ 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 사망자·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

2023. 7.



행 정 안 전 부
지방세특별제도과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에 따른 사망자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소지자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지원 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 '23. 7. 9.부터 이어진 집중 호우로 인해 세종시 등 13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23.7.19.)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지역 현황>

구분	시군구 단위	읍면동 단위
세종	세종시	-
충북	청주시·괴산군	-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
전북	익산시	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

- 해당 천재지변으로 사망한 자, 이로 인해 고통 받는 그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 필요

⇒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기준 마련

2 지방세 감면 추진방안

① 지원 근거 및 방식

- (법규정) 재난·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지방
의회 의결을 통하여 지방세 감면 可(「지방세특례제한법」 §4④)

- (지원방식) 쏑 지방자치단체 감면동의안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 추진
 - ※ '24년부터는 인적피해자에 대해 지방의회의결없이 법정감면토록 개정 예정
- 직권 감면을 원칙*으로 하되, 누락자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신청을 통한 감면 병행 추진 * 대상자 파악 후 일괄제공 예정

② 감면 대상자

-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자”라 함)
-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 이하 “유가족”이라 함)

③ 감면 내용

- 사망자·유가족의 지방세 부과세목¹⁾, 유가족의 상속 취득세²⁾
 - ┐ 1) 사망일이 속하는 연도의 1년간(2023.1.1.~12.31.)의 지방세
 - └ 2) 사망자의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을 유가족이 상속 취득한 경우 限

세 목		부과대상	납기	소관 지자체
①	주 민 세 개 인 분*	• 사망자·유가족(개인, 개인사업자) * 지방세법 §81①1가목의 사업소분 포함	8월	특광역시, 시·군
	자 동 차 세 소 유 분	• 사망자·유가족 소유 자동차	6월, 12월	특광역시, 시·군
	재 산 세	• 사망자·유가족 소유 토지·주택 등	7월, 9월	시·군·구
②	지 역 자 원 시 설 세*	• 사망자·유가족 * 소방분 限		특·광역시, 도
③	취 득 세	• 사망자의 부동산 등을 유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사망일부터 6개월말 內	특·광역시, 도

① 가족 생계에 도움이 되고, 주민이 보편적으로 납부하는 정기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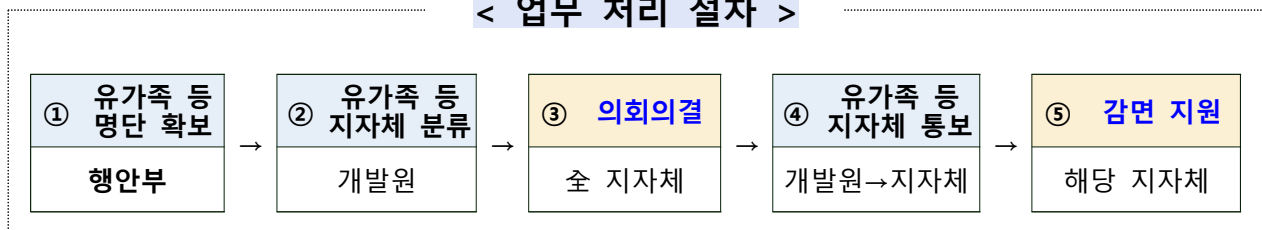
⇒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81①1가목), 자동차세 소유분, 재산세

② 재산세와 과세표준 및 부과시기가 동일하여 부과 시 감면 체감도 저하 등 그 효과가 상쇄될 수 있는 세목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③ 사망자가 소유하던 부동산 등을 사망으로 인해 그 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 취득세

3 협조사항

< 업무 처리 절차 >



○ (개발원) 사망자·유가족 내역을 토대로 既부과·부과예정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대상자 내역 통보

* (정기분) 과세기준일 현재 사망자·유가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자체 (취득세) 사망자의 취득세 물건 주소지 소재 지자체 등

- (지자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23년 정기분 지방세 면제 조치^{*}, 유가족에 대한 상속분 취득세가 면제 지원될 수 있도록

* 사망자 및 유가족에게 既부과된 지방세는 감액·환급 조치

⇒ 신속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회의결 추진

※ 지방의회 의결이 늦어지는 경우 고지유예 등을 실시하여 사망자 가족의 부담이 없도록 先조치 필요